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성무용 | 천안시장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산업화와 압축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농업정책과 농촌살리기 운동에 수십조원을 투자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며 살기좋은 농촌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농촌몰락과 농업붕괴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물질적으로 살기 좋아지고 소득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지만 과거와 비교해 현재의 농촌이 더 살기 좋고 풍요롭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05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구 소득대비 농촌가구 소득비율은 1994년 99.5%로 대등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 80.6%, 2003년 72.6%로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농촌 내부에서도 부농과 영세농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위 20%의 농가소득을 하위 20%의 농가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비율은 1998년 7.2배에서 2003년 12.0배로 확대되어 농촌내 소득불균형 심화현상은 갈수록 커져 심각한 수준이며 소득하위 계층의 탈농현상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표들 통해서 알수 있다.

참여정부는 2004년에 향후 10년 동안 119조원을 투입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농업-농촌-농민의 복잡한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솔로몬의 해법이 될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농촌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두배로 늘어 전체 농촌인구의 29.4%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젊은층의 지속적인 도시이동, 평균수명 연장, 영농후계인력 감소, 출산율 저하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으나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라고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역설한바 있다.

도시에서는 사오정, 오륙도 등 조기퇴직이 문제지만 농촌에서는 아직도 70세 이상의 농가 경영주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노인이 절반이나 되는 저소득과 열악한 복지 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고 있으므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전략을 지금까지 시설이나 자금지원 위주의 농업정책에서 사람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사는 농업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농정의 획기적인 방향전환 없이는 농촌의 위기를 타파하지 못하며 농업은 상업농과 규모농을 지향하고 구조조정해 나가되 농정을 농업 그 자체보다는 농촌과 농민을 중요시하는 지역개발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농업정책으로 정책방향의 대전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세계화·개방화에 대비하여 국가정책을 도시중심 국가정책에서 농촌중심 국가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음은 농촌경제의 수준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불문하고 수입개방 압력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미시적으로는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고 농촌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살기좋은 농촌,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문제는 지방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서 국가차원의 다양한 도농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더불어 잘사는 농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